

의료발전은 대국민신뢰로부터 ‘건강위해요인제거’를 보건의료정책으로 구현해야

한겨레신문 김양중 의학전문기자

취재_전 양 근

“대국민신뢰가 뒷받침되어야 진정으로 의료발전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건강위험요인제거를 통한 건강증진이 보건의료정책으로 어떻게 구현될 것인지, 사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에 관심을 갖고 취재활동에 여념이 없는 한겨레신문 김양중 기자.

그는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공중보건의(3년)를 마치고 나서 인턴시험을 치르고 기다리던 중 두달 정도 진로를 고민하다 한겨레신문에 입사, 의학전문기자의 길을 3년째 걷고 있다.

『의학은 가장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학문입니다. 건강위해 요인을 제거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의학의 영역이 계속 넓어지고 있습니다.

의학, 보건의료의 사회적 역할이야말로 매우

중요하며 저는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대신 필봉으로 끊임없이 사회적인 고민, 의학적인 문제를 풀어 나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합리적인 방식으로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한다는 자세로 취재전선에 나서고 있는데 보건医료를 둘러싼 전반적인 제약으로 인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학창시절이나 공보의때보다 훨씬 見聞이 많아 그만큼 힘들지만 보건의료전문기자로서(작은힘이지만) 해야 할 역할이 매우 많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어요.』





건강보험제도와 관련 그는 “얼마전 사회문제화 했던 무통분만의 경우 산모의 선택에 의해 주사를 하는 만큼 비급여가 타당한데 저출산 해소 및 제약 절개를 줄이려는 차원에서 보험급여화 하면서 주사 시 마취과와사 초빙료 등이 수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문제가 터져나온 것”이라며 정책당국의 단견을 지적했다.

『MRI 수가에 대한 의료계와 가입자측과의 갈등에 대해 가입자(소비자)단체의 합의에 의한 수가결정방식이라선 가입자의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급여전환 및 수가결정과정에서 보건경제학적인 면과 비용효과(편익)측면 등을 두루 감안해 합리적으로 정해지는 틀이 구축되지 않는 한 수가논란은 끊임없이 빚어질 수 밖에 없지요.』

건강면을 통한 언론의 건강정보 제공에 대해 김 기자는 “생활속에서 전반적인 건강위험요인 제거 방법(예방법)과 새로운 의술 등을 앞다퉈 소개함으로써 국민들이 건강행동을 실천에 옮기는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생활속의 건강위험요인 제거에 대해 개인이 건강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데서 나아가 사회·지역공동체의 틀속에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제시. 일례로 구호성 금연운동 전개에 치중할게 아니라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금연프로그램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금연을 도와야 한다고.

또한 국민을 상대로 건강위험요인을 적극적으로 제거해 나가는 사업을 펼쳐야 하는데 보건당국 및 지역공동체 뿐 아니라 건강보험공단도 앞장설 것을 주문.

보건소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지역개원가와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선 “보건소는 생활습관병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사업을 구상해 공공보건 차원에서 챙겨주는 역할을 하되 실제 진료 활동은 민간의료기관이 담당토록 민관합동으로 보건관리 활동을 펴는데 행정당국은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의 기능이 조화를 이루도록 프로듀서 역할을 하면 된다”고 나름의 해법을 제시했다.

김양중 기자는 ‘국민의 신뢰야말로 보건의료 발전의 바로미터’라며 영리병원 허용문제도 고도의 투명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